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Supporting Reality and Support System Improvement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이재현,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Jae-Hyun Lee(jhlee@cdi.re.kr), Seung-Hee Ko(kosh@cdi.re.kr)

요약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체도를 ①융·투자, ②보증·보험, ③기술개발, ④특허·인증, ⑤판로·수출, ⑥인력, ⑦창업·벤처, ⑧정보화·컨설팅, ⑨자영업·유통, ⑩대·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중심어 : | 중소기업지원 | 정책통합 | 지원체계 |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for Korea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support policy that conduct to 10 supporting sector.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similarity and duplication for SME support policy under the influence of that support system and supporting body had a problem with complexity and multi-function.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ypology analysis of supporting reality and support system improvement for the SME

■ keyword : |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Support Policy | Policy for Integrating | Supporting System |

1. 서론

중소기업은 국가경제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산업의 저변형성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중

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창출 능력, 경제발전의 원동력, 기술개발의 원천, 산업의 연관(전후방 효과), 산업의 경기대응력 제고, 수입유발적 산업 구조의 개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등에 있어 중소기업

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중소기업 지원주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의 강화가 필요시 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은 지원주체별로 융·투자, 보증·보험, 기술개발, 특허·인증, 판로·수출, 인력, 창업·벤처, 정보화·컨설팅, 자영업·유통, 대·중소상생협력 지원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고, 2007년 기준으로 16개 소관부처(廳 포함)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53개 유관기관의 지원내용과 추진형태가 해당기관별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각종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원효과가 저하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복잡·다기화에 따른 지원효과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각종 시책의 운용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 중소기업 종합정보서비스(SPI)에서 구분한 10개 분야의 지원시책을 인벤토리화하여 지원시책의 흐름에 따른 유형별로 중소기업지원 추진실태, 지원기관간 연계·협력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기존 중소기업지원과 기존연구 검토

1. 현행 중소기업지원체계

중소기업 전담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기특위)가 있으나 중기특위는 부처간 중소기업 정책조정 및 평가를 위해 1998년에 설치되었다가 비상근 위촉직 위원장(장관급) 권한과 독립관청이 아닌 자문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문제, 조직구성의 한계로 2008년 2월 폐지됨으로써 기존의 3중 구조가 2중 구조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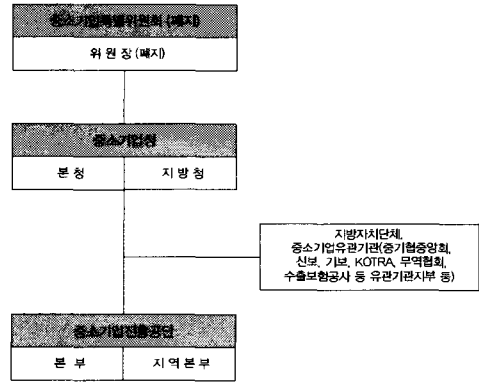


그림 1. 현행 중소기업지원 주요체계

2.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률 검토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률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들로 위로는 헌법으로부터 아래로는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들까지 다양하다. 이중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며, 그 외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한 13개의 법령과 이들과 관련된 13개의 시행령, 그리고 8개의 시행규칙이 있으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정부와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창업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창업촉진 및 조직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이 있다. 또한 구조고도화 및 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등이 있으며 지방 및 특정계층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상기한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률의 체계를 종합적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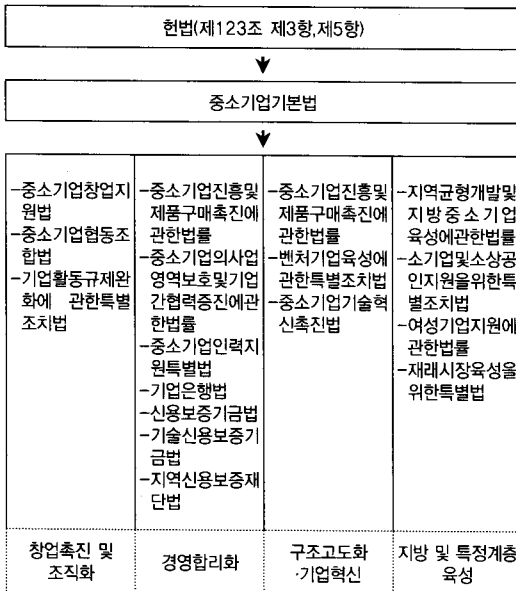


그림 2. 중소기업 관련 지원법 체계

중소기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지방과학기술기본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각종 계획들은 국가균형발전계획,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 산업기술기반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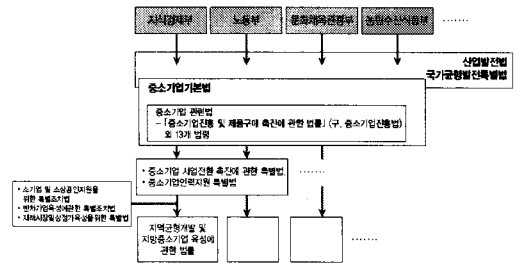


그림 3. 중소기업 지원관련법 간의 관계

3. 기존연구의 검토

심우일(2007)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국가 주요계획을 검토하고 여러 중소기업 지원 분야 중 연구개발 분야와 인력지원, 장비구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실태를 분석하여 복잡한 지원체계, 법률 및 정책은 단순화 하는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윤보·노화봉(2005)은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와 특징 그리고 법체계를 분석하면서 경쟁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정책이념의 조화 강조, 복잡다기한 법체계의 정비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박동수·정성한·김기남(2005)은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기관들의 직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구·경북 중소기업지원기관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유효성 평가함으로써 지원서비스에 대한 규범적 방향을 제공하였다.

오철호(2003)는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의 행정수단과 행정자원을 분석하여 지원기관의 3중 구조(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기청, 중진공)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역할 분담을 강조하였다.

이희용·박태경(2004)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원에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 재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형 지역혁신체계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관련 제도와 법률, 지원주체(기관), 지원부문 및 대상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혹은 통합적 추진을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4. 분석틀 설정

이상과 같이 기존 중소기업지원과 이에 따른 기존연구를 고려하여 분석틀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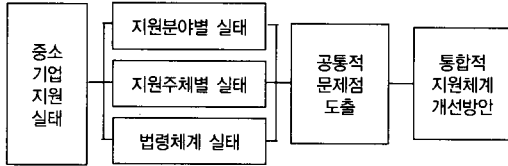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분석틀 설정

III. 중소기업지원 실태 분석

1. 중소기업지원 추진실태의 유형 분석

중소기업지원의 핵심기관인 중기청, 지식경제부, 중진공 등의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 상·하반기 1년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중소기업지원사업의 분석대상사업

현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크게 ①용자·투자, ②보증·보험, ③기술, ④특허·인증, ⑤판로·수출, ⑥인력, ⑦창업·벤처, ⑧정보화·컨설팅, ⑨지역업·유통, 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중소기업지원사업 대상

지원부문	지원사업내용
용자/투자	시설자금, 운전자금, 원자재자금, 기타자금
보증/보험	신용보증, 기술보증, 신용보험, 수출보험, 각종 공제사업
기술	연구개발·사업화, 기술인력·장비, 기술이전·거래, 기술지도
특허/인증	특허, 표준, 인증
판로/수출	공공구매·조달, 국내외 전시·박람회, 시장정보·상담, 시장개척단, 마케팅지원
인력	인력정보·채용, 인재개발·양성, 근무환경 개선, 유공자 선정
창업/벤처	창업자금, 벤처인증, 창업보육, 투자, 입지(공장설립)
정보화/컨설팅	교육·정보제공, 컨설팅, 정보화 구축
지역업/유통	소상공인 자금, 재래시장, 유통, 여성, 장애인
대·중소상생협력	기술, 판로, 인력, 공정거래

자료: 중소기업종합정보서비스(SPI)에 등록된 지원사업 리스트 재구성

1) 이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종합정보서비스(SPI)에 등록 및 업데이트된 시책을 정리하였음.

1.2 지원주체 및 지원유형별 실태

사업추진 주체별 사업 및 예산은 2007년 기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의 총 185개(지역단위 유관기관 제외) 기관에서 총 1,361건의 사업에 약 19조원을 투입하였으며 중앙부처는 765건으로 총 사업의 56.2%를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 322건(23.7%), 유관기관 274건(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전체사업비 19조 중에 중앙부처가 9조7천억으로 51.1%를 차지하였으며, 유관기관 4조7천억(25.2%), 지자체 4조 5천억(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비 중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의 사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제도”가 2조 4,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이를 보면,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은 기술개발 지원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고, 지자체는 판로개척·수출 지원에 비교적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로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 자금지원이 평균적으로 많이 지원되었다.

중소기업지원의 흐름에 따른 지원체계를 유형화 시켜보면,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Type I,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거쳐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Type II, 지자체에서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Type III, 중앙부처에서 유관기관을 거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Type IV, 지자체에서 유관기관을 거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Type V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를 보면, 2007년 전체 1,361건 지원사업 중, Type I 9.1%(124건), Type II 0.1%(1건), Type III 8.0%(109건), Type IV 60.7%(827건), Type V 22.0%(300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대부분 지원사업은 유관기관을 거쳐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ype I	중앙부처	→		중 소 기 업 (수 요 자)	9.1%(124건)	
Type II	중앙부처	→	지자체		→	0.1%(1건)
Type III	지자체	→			8.0%(109건)	
Type IV	중앙부처	→	유관기관		→	60.7%(827건)
Type V	지자체	→	유관기관		→	22.0%(300건)

그림 5. 중소기업지원체계 유형화

또한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중앙부처는 전국단위 유관기관(예를 들어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주로 지원업무를 연계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방단위 유관기관(예를 들어 각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테크노파크 등)과 주로 지원업무를 연계하고 있다.([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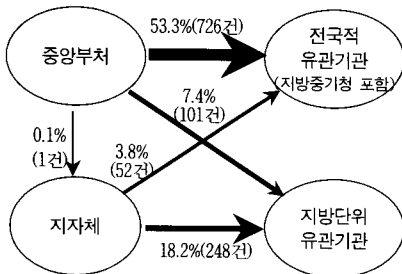


그림 6. 중앙 및 지방의 유관기관과의 관계

지원부문으로 살펴보면, 중앙부처-유관기관의 지원체계를 가진 Type IV은 827건 중 기술개발 부문이 전체 298건(2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판로·수출 부문이 125건(9.25%)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유관기관의 지원체계를 가진 Type V은 300건의 사업 중, 판로·수출 부문이 113건(8.3%), 기술개발 부문이 79건(5.8%)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가진 Type I은 124건의 사업 중, 기술개발 부문 33건(2.4%), 판로·수출부문 29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Type III은 융·투자(자금지원) 부문이 32건(2.4%), 판로수출 부문이 30건(2.2%)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거쳐 중소기업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1건으로 미약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보다는 Type IV, V에서 지방유관기관과 업무 연계시 지자체와 일정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기술개발지원, 판로·수출지원, 융·투자지원(자금지원) 부문이 주요 지원부문인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업을 알 수 있다.

2. 중소기업지원 체계의 문제점: 자금지원과 판로·수출부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추진실태는 총 10개 부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중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판로수출지원 부문이 지원빈도가 많은 동시에 중복성, 복잡다기성이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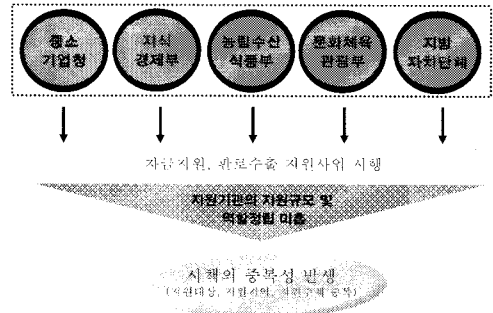


그림 7. 지원정책의 중복성

표 2. 2007년도 지원주체별 지원체계

Type 구분	I		II		III		IV		V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융/투자	9	0.7	0	0.0	32	2.4	92	6.8	36	2.6	169	12.4
보증/보험	1	0.1	0	0.0	3	0.2	29	2.1	7	0.5	40	2.9
기술개발	33	2.4	1	0.1	12	0.9	298	21.8	79	5.8	423	31.1
특허/인증	5	0.4	0	0.0	4	0.3	48	3.6	13	1.0	70	5.1
판로/수출	29	2.1	0	0.0	30	2.2	125	9.2	113	8.3	297	21.8
인력지원	21	1.5	0	0.0	15	1.1	110	8.1	10	0.8	156	11.5
창업/벤처	19	1.4	0	0.0	7	0.5	25	1.8	21	1.6	72	5.3
정보화/컨설팅	4	0.3	0	0.0	3	0.2	51	3.8	15	1.1	73	5.4
자영업/유통	3	0.2	0	0.0	2	0.1	44	3.3	5	0.4	54	4.0
대·중소 상생협력	0	0.0	0	0.0	1	0.1	5	0.4	1	0.1	7	0.5
계	124	9.1	1	0.1	109	8.0	827	60.7	300	22.0	1,361	100.0

이 중 기술개발지원은 중소기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기술이 다양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중앙부처, 유관기관 등)의 세분화 및 다양화는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금지원과 판로수출지원을 사례로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2.1 자금지원관련 문제점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중기청에서도 재해복구, 수출금융, 원부자재구입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목적 중복)	
중기청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 (재해복구, 수출금융, 원부자재구입)
지자체	지역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

그림 8. 경영안정자금지원의 목적중복

기금의 경우, 해당 부처와 지자체에서 특정 고유의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운영자금, 건설 및 개보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기청과 지자체에서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지원대상이 관광산업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중기청과 지자체의 경우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원기관간 공유하고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여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금지원사업(대상 중복)		[지연영위]
중기청	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 사업 (수산업 대상)	
지자체	지역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 사업 (지역산업 대상)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운영자금) (문화체육관광산업 대상)	

그림 9. 기금지원사업의 대상중복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지원의 세부사업들 중 일부는 본청에서 일부는 지방유관기관(예,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다기성이 있다. 예를 들어, 충남의 경우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4,500억 중에서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1,800억은 道 본청에서 추진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2,700억은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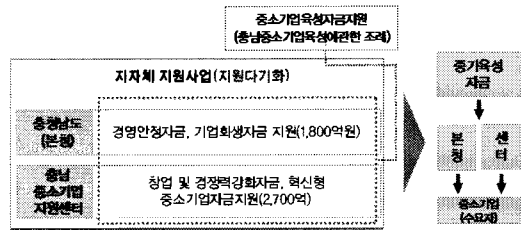


그림 10. 지자체 지원사업의 지원다기화

2.2 판로수출관련 문제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의 경우 중기청 등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후 각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체예산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중앙과 지방의 중복투자 성격으로서, 판로개척과 수출지원의 측면에서 자칫 판로확대에 있어 혼선과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다.

시장개척의 경우, 중기청에서 충남미 지역의 시장개척단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인천, 울산, 경남에서 충남미 지역의 시장개척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 카타르, 러시아 지역의 시장개척단 지원을 중기청에서 추진하는데 성남시에서 러시아, 유럽 지역 시장개척단을 지원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지역은 중기청과 광주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시장개척지원사업 (지원지역 중복)	
중기청	중남미, UAE, 카타르, 러시아, 인도네시아
지자체	중남미(인천, 울산, 경남), 러시아(성남시) 인도네시아(광주)

그림 11. 시장개척지원 지역의 중복

전시박람회 지원의 경우,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전문전시회 지원 명목으로 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지만, 중기청은 여성기업을 여성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같은 부처내에서도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하나는 포괄적으로, 다른 하나는 특정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전시박람회를 지원하고 있어, 중앙-지방간, 지원대상간, 지원지역간의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처간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 지경부(구. 산자부, 정통부)에서 전시박람회 지원을 각 각 하고 있다.

전시박람회 지원사업 (목적 및 대상 중복)	
중기청	중소기업전문전시회 지원 사업 (순산업 대상 & 여성기업대상: 자체중복)
지자체	지역산업 관련한 전시박람회 지원 사업 (지역산업 대상)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관련 박람회 지원
지식 경제부	지역 관련기업 전시회 지원 ex. (구) 정통부: 제주도 국내외전시회 지원사업 (구) 산자부: 경기도 마나ITP 국내외 전시박람회지원사업

그림 11. 전시박람회 지원의 목적 및 대상중복

홍보지원의 경우도 중기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2007년의 경우 경기, 충북, 성남)에서도 홍보지원을 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문체부에서 해외미디어 홍보지원, 지경부에서 경기, 부산, 광주, 제주에 홍보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

홍보지원사업 (지원주체 다기화 및 지원대상 중복)	
중기청	지자체 중소기업 홍보지원사업 (경기, 충북, 성남)
문체부	해외미디어홍보지원
지경부	지자체 홍보지원사업 (경기, 부산, 광주, 제주)

그림 11. 홍보지원사업의 지원주체 다기화 및 대상중복

IV.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모색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그림 1]과 같이 수직적 계통이 아닌 수평적 계통 혹은 독립적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점차 사각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유사·중복성을 내재하게 되었다는 점,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률간 관계를 보면 권한 위임 또는 위탁 규정의 문제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각 부처에서 특성과 목적에 맞게 시행하고 있으나, 주요 지원분야에서 유사중복 성격이 있다는 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분 없이는 지원중복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및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법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을 제외한 그 외의 법률은 모두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경우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력지원시책의 법률상 다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중앙부처-유관기관-지자체의 위임 및 위탁업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육성에 따른 지원시책이나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한 시책 및 분야를 정하여 법률상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 종합정보 서비스 SPI-1357 적극 활용 및 지원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인지 부족으로 사장되기가 쉬운 환경에서 정책혁신의 성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정보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인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가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을 중소기업 정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실시간 정책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책의 내용 및 변화된 사항을 경영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과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정책자금 One-Process 지원시스템, e-Coupon제도, 기술혁신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지원절차를 온라인화 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 및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지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이 복잡다기화된 것은 비단 지원기관 수가 다양해지고 많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의 지원정책이 해당 기관의 고유사무로 계획 및 결정되기 전에 그 지원사업이 다른 지원기관과 중복성을 검토하고, 그 유무에 따라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에게 전달된다면, 내용상 중복으로 인해 행정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총괄관리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는 협력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하다. 이는 단순한 지원사업의 정보공유의 차원을 넘어 지원정책이 발굴 및 집행시에 명확한 지원업무 분담과 지원기관의 고유 목적을 고려한 정책협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과 지원정보망 활용이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 질 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체제를 둘러싼 제반여건과 문제를 지원시책사례검토를 통해 지원기관(지원주체)별, 지원부문별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사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서 급변하고 있는 외부효과를 능동적으로 대응 및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보다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방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원기관들간에 역할 및 기능의 불명확성과 지원체제의 중복성 문제로 인해 각종 지원시책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지원과 지원기능 및 역할 조정, 관련 법 제도 개선, 지원기관간 지원업무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으로 중소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인 기업운업을 위한 자금지원과 안정적인 판로·수출 지원,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개발과 이를 상용화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부문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제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심우일, 지방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
- [2] 오철호, “중소기업정책의 지원체제 개선방향”, 2003년도 특별기획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정책학회, 2003.
- [3] 이윤보, 노화봉,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원, 2005.

[4] 이회용, 박태경. 중소기업지원 및 혁신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4.

[5] <http://www.spi.go.kr/index.jsp>

저 자 소개

이 재 현(Jae-Hyun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사)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석사)
- 2009년 2월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박사 수료)

• 2004년 3월 ~ 현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정치경제, 지방자치, 시민사회

고 승 희(Seung-Hee Ko)

정회원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5년 8월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지방행정, 성과관리